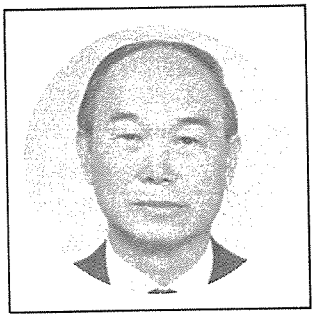
國防·外交 면에서 본 韓國과학기술의 課題

"민족의 自尊과 時代的 도전에 對應을…"



姜 英 勳
〈國會議員·前外大大學院長〉

半島周邊強大國 사이에서 유구한 半萬年歷史와 전통을 유지해온 韓民族의 지혜와 저력은 실로 문화민족으로서의 독창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時代 東洋最古의 첨성대, 高麗時代의 인쇄술, 李朝의 천문관측기, 해시계, 물시계, 측우기 등 빛나는 발명속에 韓民族의 독창성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은 韓民族의 과학기술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또한 민족의 과학적 자질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독창성에 의하여 성취된 科學技術分野의 업적은 민족의 자주성과 자긍심을 배양하며 접촉하는 他 民族文化도 우리生活에 적합하도록 純化修正함으로써 民族文化의 특성을 길러온 것도 사실이다.

李朝末期에 鎖國政策으로 외부문화와의 접촉이 단절되며 민족의 독창성은 冬眠狀態에 빠짐으로써 급기야는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민족비운을 면치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에야 우리 민족은 상실하였던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先進 科學技術에 자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人類社會는 새로운 科學技術을 통하여 後産業黃金時代에 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時代에 사는 韓民族은 과학기술발달면에서 새롭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와 같은 도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실로 科學韓國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科學技術의 發達로 現代國際社會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고찰하고 특히 原子力時代에 있어 가공할 파괴무기가 國際社會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外交國防側面에서의 國際社會性格을 감안하여 科學韓國의 과제를 고찰하는 데 그 주안을 둔다.

◇ 과학의 발달과 국제사회성격

現代科學의 발달은 國際社會性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로는 人類生活圈擴大를 들 수 있다. 수송력과 통신력의 경이적인 발달은 지구표면을 한 개의 인류사회생활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만하여도 기선으로 대평양을 건너는데 3주내외가 걸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요사이는 비행기에 의한 태평양횡단은 24시간 이내로 단축된 것이다. 전신 전화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지구표면 어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든지 즉시로 세계 각지에 전파되게 만들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실험실 속에서 예견되는 일이거나 이론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유행어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도 현대과학의 면모의 일단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수한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는 하나가 된 것이다.

둘째로는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이 생산유통등 國際經濟社會面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다. 첨단기술들이 경제분야에 적극도입되어 인류의 물질면생활을 다양하게 하였으며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인류는 이제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계의 자동화경향은 인간을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인류가 물질생활면에서 빈곤을 驅逐하고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때 인류사회에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상 경제생활면에서 인류는 국경선을 넘어 地球共同運命體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C 같은 것은 廣域生活圈形成의 좋은 사례하고 생각된다.

세번째로 國際政治社會面에 대한 과학기술의 영향이 국제경제면에 대한 것과 평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적하여야 할 과학의 발달과 國際社會性格과의 관계라 하겠다. 主權國家間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도 아직 국가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여전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금일의 국제정치사회의 성격인 것이다.

UN기구 등 超國家的 국제평화유지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간의 이익충돌이 첨예화될 때 그 대립충돌을 중재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 하겠다. 심지어는 主義思想을 같이하며 國際主義原則에서 세계평화를 수립한다고 하는 共産主義國家間에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전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분쟁이 전쟁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류는 경험을 통하여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美國의 베트남전쟁, 蘇聯의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란 · 이라크전쟁, 베트남 · 캄보디아전쟁 등을 통하여 우리는 변천하는 국제사회성격을 주시하게 되었다.

◇ 원자무기의 파괴력과 국제사회

科學技術의 발달은 그 시대 시대의 인류의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기여하는 동시에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 생활권을 확장하며 패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쟁도구로서의 武器制度發展을 위하여 공헌하여 왔다.

그와 같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인류사회를 원자력시대까지 이끌고 온 것이다. 핵분열 또는 융합에 의한 미증유의 열원개발로 인류공존번영의 가능성과 동시에 人類共滅의 위험성을 초래한 것이 원자력시대의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원자무기에 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말 日本 廣島에 투하된 20KT 원자폭탄 한발로 全市가 파괴되고 수만명의 인명이 일거에 희생된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원자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 소부대의 전투행위나 대부대의 전략행동도 따지고 보면 화력 즉 파괴살상력과 기동력을 작전목표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연계조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자무기는 가공할 파괴력과 대륙간 사격수단의 배합으로 兵員이나 部隊를 주축으로 하는 기동없이 일거에 지구표면상 어느 곳에 있는 목표물도 공격파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原子武器制度의 특징은 종래의 재래식무기가 가졌던 파괴력과 사격거리상 불가피하게 가졌던 제한조건을 극복하여 원자무기자체가 독립된 전투력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종래의 무기는 공격 · 방어겸용으로 작전계획에 따라 공격용으로도 사용하며 방어용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원자무기의 발명은 비로소 공격용무기와 방어용무기를 무기자체에서

구별케 되며 아직 공격무기를 막아낼 충분한 방어용 원자무기를 발명치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SDI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방어용원자무기 제도를 위한 연구발전계획이 세간에 파다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아직 방어용원자무기는 연구개발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하나 原子武器制度가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하나는 상대방이 발사한 원자공격무기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레이더 망으로 포착이 가능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여 오는 적의 원자무기를 파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 대륙간유도탄에 我側 목표물이 명중파괴되기 전에 자기의 원자무기를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만일 原子武器保有國家에 원자무기를 사용하는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쌍방의 共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原子武器制度의 파괴력이 國際社會性格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1956년 蘇聯共産黨 제20차당대회에서 當時首相 후르시쵸프가 蘇聯의 對美原子戰力이 열세한 상황하이긴 했지만 이제 전쟁 수단이 世界赤化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단언하고 議會主義에 의한 世界赤化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원자력시대에 있어서의 國際社會性格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原子武器保有國은 몇 개의 강대국에 국한되어 있지만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원자무기 생산보유가 강대국의 전유물로만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상하여 國際政治理論家中에는 大小國을 막론하고 자국의 이익보호관점에서 國際政治社會에서의 거부권행사가능성도 논의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原子力時代에 접어들어 전쟁에 의한 共滅의 가능성 앞에 노여진 인류가 과거의 弱肉強食의 무법천지인 국제사회성격을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일이며, 그 생존을 위하여 공존의 원리를 확립하고 공영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原子力時代에 접어들어 전쟁에 의한 共滅의 가능성 앞에 노여진 인류가 과거의 強肉強食의 무법천지인 국제사회성격을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일이며, 그 생존을 위하여 공존의 원리를 확립하고 공영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부 平和論者들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원자무기부터 폐기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共滅의 위험성을 직시하면서 공존공영의 의식화 단계없이 가공할 파괴무기만 폐기하였다고 과연 세계평화가 보장되겠느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여야 할 문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시대에 있어서의 세계평화문제는 국제정치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 *국제사회의 외교 · 국방 측면*

과학발달이 국제사회성격에 미친 영향, 특히 原子武器制度가 가지는 영향등을 고찰할 때, 지구표면 전체가 人類社會生活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적 기반을 보는 동시에 원자무기의 출현으로 인류의 共滅의 가공할 가능성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 일원으로 삼고 있는 한 國家의 외교와 국방문제는 물론 黑白論理 등 단순한 입장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전쟁에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게 된 국제사회에서 國際政治面과 國際經濟面에서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높아가면서도 主權國家間의 이해상충을 평화적으로 완전히 통제 · 조정하는 國際政治經濟機構가 미발달한 정세가 금일의 국제사회성격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國際環境에서 각 國家는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서, 한 국가의 외교와 국방문제의 기본성격이 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느 國家이든간에 외교

> 원자력시대에 있어서는 외교가 실패한 후 전쟁이 계속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국책수행수단이라기보다는 외교와 군사가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가운데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노후하게 되어가고 있다.

와 국방에는 他 國家와의 관계에서 대립과 협조라는 양면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과학발달이 지구촌건설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여도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통제 ·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간 대립이 없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대립을 폭력 즉, 전쟁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게 되어감으로 협조의 면을 무시할 수도 없게된 것이다.

과거 國際間紛爭을 최종적으로 전쟁에 의해서 해결하던 시대에는 전쟁은 일방의 승리를 결과하여 國利民福을 보장한다고 생각되었다. 헤겔과 같이 전쟁을 찬양한 학자도 있었으며 共産主義者들과 같이 전쟁을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으로 분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에서는 국가간의 교섭을 담당한 외교가 실패하면 군사가 분쟁에 의하여 문제를 강제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시대에 있어서는 외교가 실패한 후 전쟁이 계속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국책수행수단이라기보다는 외교와 군사가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가운데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게 되어가고 있다. 외교와 국방분야에 있어서 國家間 이해관계상 대립이 첨예화될 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기민하고 적절한 외교활동이 훈련된 우수한 외교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신속한 통신,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적시 적절한 군사력의 운영 등 고도의 외교 · 군사기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군사에 관한 한 과거에는 일체를 비밀로 하는 것이었지만 원자력시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국군사력을 과시하게 된 것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보다도 전쟁을 억제하는 군사 및 외교전략이 더욱 중요시되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을 억제하는 外交 · 國防機能이 강조되는 반면 원자력시대에 있어서의 평화스러운 국제사회질서확립은 외교 · 국방의 새로운 시대적 召命課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개관할 때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체로서의 질서확립에 앞서 그 중간단계로서의 國際地域社會 생활권설립의 경향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地域社會 생활권수립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과학한국의 과제

원자력시대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에서 일반국가의 외교국방의 임무를 개관함에 있어 전쟁억제와 국제사회평화건설이라는 兩大使命을 주시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일반론에 입각하여 科學韓國의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사회 특수성격은 어떤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후 美蘇兩超大強國間의 냉전체제하에서 양국의 안보, 이해의 충돌을 반영하여 韓半島는 남북으로 양분되었으며 美軍점령지역으로 된 韓半島南半部에 수립된 大韓民國이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영향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가치관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행이도 우리 민족의 傳統固有精神과 新生民國의 建國本義와 아무런 대립상충되는 것이 없는 생활관과 가치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開國初期로부터 弘益人間이라는 생활철학을 강조하였다. 홍익인간이란 정신이야말로 항상 상대방을 인식 인정하며, 그 입장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호혜정신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생활철학이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정신이 왕정하에서는 인본선정을 강조하였으며, 日帝

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신생국가를 건립함에 있어 우리 민족은 自由民主主義國家 건설을 지향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弘益人間의 인본주의사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건국이념으로 발전되는 곳에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新生 大韓民國이 미국정치경제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정반대입장에서의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과학한국 건설이란 점에서 韓美상호협력관계는 경시할 수 없는 일로 世人이 공감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이후 美蘇의 兩極冷戰構造가 변천하면서 韓半島周邊 동북아세아/서태평양지역에서는 한반도주변강대국관계가 세력균형체제로 변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하여 왔다. 동북아세아/서태평양지역 4強이라고 볼 수 있는 美·日·中·蘇 4개국은 각각 상호간 협력하는 일면과 대립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4강세력균형의 특징은 蘇聯의 동지역에서의 霸權確立에 대항하는 美·日·中의 협력체제 속에서 볼 수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東北亞/西太平洋地域의 세력균형체제하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韓半島가 가지는 전략적 위치는 美·蘇 兩極冷戰構造下에서와 그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國防面에서 韓國의 위치를 보면 민족이 통일될 때까지는 분단된 南北韓이 각각 韓半島周邊四強에 대등한 지위에서 안보를 논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통일이 된 후에 동북아/서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그야말로 과학한국의 자격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국토의 규모나 인구의 수로 보아서 周邊強大國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현대 과학기술과 무기제도의 성격은 科學韓國建設의 도에 따라 어떤 강대국도 우리의 안보능력을 얕보고 우리의 강도를 엿보는 경솔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토의 규모나 인구의 수로 보아서 周邊強大國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현대 과학기술과 무기제도의 성격은 科學韓國建設의 도에 따라 어떤 강대국도 우리의 안보능력을 얕보고 우리의 강도를 엿보는 경솔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6천만 이상되는 우리 인구는 半島規模의 국토를 어떠한 외침세력으로부터라도 방위할 수 있게 된 것이 현대 과학기술과 무기제도의 특징이라 생각된다.

1969년 미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Nixon Doctrine 을 선언한 후 駐韓美軍兵力을 감축하게 될 때, 우리의 國防力의 급속한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케 되어 誘導武器 등 자체생산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美國戰略關係機關 및 專門家들 사이에 美國極東戰略에서 韓國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駐韓美軍을 철수할 때 대한민국은 자국안보상 필요로 원자무기제도를 개발할 것이며, 또 大韓民國 과학기술은 충분히 그와 같은 국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原子武器制度를 자체생산에 의하여 보유케 될 때 동북아/서태평양지역의 四強勢力均衡體制에 불안정요소를 산출케 된다는 이유로 駐韓美軍完全撤收를 반대하였다는 소문이었다. 그만치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과학기술 잠재력은 이미 열강의 주목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로 原子戰力의 보유는 강대국의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나 원자전력은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강대국의 국가적 압력에 대하여 거부권행사의 보장력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강대국 세력각축에 휘말리기 쉬운 모든 국가는 스스로 원자무기제도를 개발하던가, 원자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동맹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현금의 국제정치 사회추세라고 할 것이다.

大韓民國은 동맹관계에 의하여 안보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南北軍備競爭을 유발하지 않기

우리가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上의 결함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한 외교역량이 요청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비상시를 감안하여 百年大計下에 과학한국의 건설을 위하여 국책기조를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위하고 막대한 군비를 國民福祉分野에 할애하기 위해서도 原子武器制度를 자체생산코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자전력에 해당하는 역할을 외교분야에서 담당하여 적절한 同盟關係維持發展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大韓民國의 국방과 외교의 밀접불가리의 관계를 科學韓國建設面에서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列強의 세력균형체제 속에서 大韓民國의 안보를 위하여 적절한 集團防衛體制維持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독자적인 안보역량을 창출키 위한 외교의 역할이야말로 필요충분한 동맹체제하에서보다 더욱 중대함은 재언을 불요로 하는 일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上의 결함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한 외교역량이 요청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비상시를 감안하여 百年大計下에 과학한국의 건설을 위하여 국책기조를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 론

科學技術의 발달은 양날로 된 예리한 칼과도 같아서 생산력으로 활용이 되면 人類社會生活을 풍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파괴력으로 이용이 되면 정당방위의 방패로도 되지만 인류사회를 파괴의 심연으로 몰아넣는 흉물이 아닐 수 없다.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발명되는 原子武器制度는 마침내 교전국가를 共滅狀態로 몰아넣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을 산출케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原子武器의 폐기야말로 세계평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理想主義者들은 유사이래 신무기가 발명될 때마다 유사한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세계평화는 그와 같은 이상주의자들에 의하여 성취되지 못했다.

原子武器에 관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 強大國사이의 대규모전쟁을 억제한 주요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共滅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무기 그 자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냉엄한 現實國際社會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전쟁은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 과거의 인류사라 하면 전쟁은 共滅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공존을 억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人類史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時代에 한 國家의 外交國防機能이 전쟁을 억제하면서 인류가 共存共榮을 즐길 수 있는 國家社會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공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실로 21세기의 國際政治의 기본과제라 하겠다. 그와 같은 운명공동체적인 국제사회건설은 과학기술발달을 중지시키거나 후퇴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共滅의 원자무기를 발전시킨 과학기술은 이제 공존공영의 人類運命共同體建設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기술면의 人類運命共同體建設을 위한 새로운 기반구축은 반드시 인체의 화합을 보장하는 인간정신의 함양과 共存共榮理論의 확립발전을 병행할 때에만 그 기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우리 겨레의 특별한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로 科學韓國의 과제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신과학부문에 있어서도 민족의 자존과 더불어 인간사회의 共存共榮을 위한 막중한 목적완수에 있다 할 것이다.